



민 사 소 송 법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수료
月刊 考試界 기획위원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교수, 중앙대 법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사소송법)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전임
윌비스 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現 서남대학교(아산캠퍼스)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2. 저서

테마 민사소송법 전면개정판(2005), 고시계
EBS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초판(2009), 고시계
사례 민사소송법(이규호·김춘환 공저, 2012), 진원사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제2판(2013), (주)윌비스
For 春 김춘환 민법(2014), (주)윌비스
For 春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4판(2015), 더 채움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4판(2015), 더 채움

□ 강의 일정 및 교재

1. 강의일정

주말반 : 1.2(토) ~ 3.12(토), 총 10회, 저녁 7:00 ~ 10:30

평일반 : 3.2(수) ~ 3.15(화), 총 10회, 오후 2:00 ~ 5:30

2. 교재

: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제4판(김춘환 著) + 시험용 법전

□ 2013 적중 문제

1. 乙과 丙은 도급계약에 따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금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그런데 수급인인 丙은 소속 근로자인 甲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다음 물음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 (1) 위 소송에서 甲이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인 A의 대리권의 범위는?(20점)
- (2) 위 소송계속 중에 乙이 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丙이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丙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치는가?(30점)

- GS-3순환 제6회 모의고사 문제

<제2문의 2>

선정당사자

- 민소법 강의안 172면 - 소송대리권의 범위

2. 소송상 화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 최종정리 373면, 핵심암기장 182면

3.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 GS 2,3순환 연속출제

<제1문>

문서의 제출의무(50점).

□ 2014 적중 문제

- 핵심암기장 43면, 93면, GS-2순환 모의고사 제1회 문제 유사

1. 근로자 甲은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乙 회사는 명칭만 회사일 뿐 A, B, C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다만 아래 각 지문은 상호 무관함)

(1) 甲은 乙 회사를 피고로 해서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¹⁾. (25점)

(2) 甲이 적법하게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에서 제1심 법원이 甲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처분 이후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동 임금지급판결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25점)

- 핵심 암기장 6면, GS-3순환 모의고사 제1회 문제 유사

2. 甲은 乙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고 임금과 퇴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수령하였다. 甲이 제기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3년여가 경과한 뒤 乙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일부터 정년 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권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²⁾. (25점)

- 핵심 암기장 85면, GS-2순환 모의고사 제2회 문제 그대로 출제

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³⁾. (25점)

- 1) 김춘환 GS-2기 모의고사 제1회 문제 유사 : D사는 부채가 상당히 많았는데 IMF이후 경영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의 성과도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 A·B·C는 D사와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추가 지원하면서 경영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 채권관리위원회(甲)를 결성하고, D사 내에 甲의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위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임받았을 뿐 정관이나 총회를 갖추기 위한 조직행위는 없었다. 채권관리위원회(甲)는 A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업무집행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甲은 D사가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 추심으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A·B·C의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한편, D사의 경영에 요하는 자금은 甲이 A·B·C와 연락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1. 甲 명의로 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10점). 2. 만약 인정되지 않을 경우, ①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지, ②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시오(20점).
- 2) 김춘환 GS-3기 모의고사 제1회 문제 유사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대해 논하시오(50점).

□ 2015 적중 문제

- 핵심암기장 323면, 181, 182면, GS-2순환 모의고사 제7회 문제 유사

1. 甲은 A은행과의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 조항 등이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A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인 乙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당초에 甲이 피고로 삼은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A은행 부서장인 리스크관리본부장을 피고로 특정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자, 甲은 예비적으로 A은행도 피고로 추가하였다. (50점)

(1) 위와 같은 소송형태의 적법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 및 판단에 대하여 논하시오4). (30점)

(2) 이 때 피고 A은행에 대한 소장부분을 A은행 사무원인 丙에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하였다면, 이러한 송달은 적법한가? (20점)

- 핵심암기장 22면, 그대로 출제

2. 사물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핵심암기장 241면, GS-3순환 모의고사 제4회 출제

3. 재소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2015 시험 총평

* 총평

이번 시험은 송달 부분을 제외하고는 강의나 모의고사에서 한 번 씩은 다루었던 주제들이므로 무난하게 잘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반응은 예상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출제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문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 설문 1.의 (1)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강사가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해 왔던 주제였고(대륙법 계통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강조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꾸준히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었습니다(2015년 2기 7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 판례에서 판시 했던 제70조의 법률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소송법도 포함 된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아래의 모범답안 같이 모두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하는 바와 같이 소송형태의 적법여부, 법원의 조치, 법원의 판단 순서대로 언급하면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형태가 적법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판례에 의하면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2)의 설문은 (1)의 소송형태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출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김춘환 GS-2기 모의고사 제2회 문제 그대로 출제!!! - 다음에 대해 논하시오. 중복소제기의 금지(50점) - 변리사 21, 30, 34회 기출

- 4)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丙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그 골동품을 丙에게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丙이 乙과 무관하다는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丙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다음 설문은 상호독립적임>. 1. 이와 같이 예비적으로 丙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13점)(司試 제46회 유사) 2.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1심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심증을 얻은 경우 제2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2점)(司試 제53회 유사)

2. 설문 1.의 (2)에 대하여

송달은 강의 시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요즘의 시험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선택과목이어서 전면적인 케이스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출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강의 시에 강조한 바와 같이 송달 문제는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제178조, 제183조, 제186조 조문으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전에서도 이 조문 3개를 가지고 사안에 잘 적용을 시켜보면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더 잘 적는다면 출회(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는 것을 언급해 주면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만 아예 송달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은 뭘 적어야 하는지 당황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설문 2. 에 대하여

사물관할은 합의관할, 변론관할 만큼 A급은 아니나, 변리사 34회 기출 문제이고, 무엇보다 이번 2015년 1월 28일에 인지규칙, 민소법규칙 큰 개정이 있었으므로, 출제가 가능하다고 강의 시에 강조하였습니다(2014년에는 모의고사에 출제도 했음). 강의 시에 강조하였듯이 사물관할이 출제되면 핵심은 이번에 고액 단독사건이 신설되고, 고액단독사건은 항소심이 고법이 되며, 단독사건임에도 비변호사대리가 불가하다는 특징을 꼭 언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목적의 값(소가) 부분도 합산의 원칙과 그 예외 부분도 언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복청구의 흡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부대청구의 불산입 등). 이 문제도 제 강의를 꾸준히 들은 분이면 적어도 앞의 강조 부분은 어떻게든 서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당황한 수험생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4. 설문 3. 에 대하여

재소금지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므로, 모두 잘 서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모의고사에서 5년간 수없이 출제했고, 무엇보다 기존 문제에서 민소법의 3대 축인 기판력, 중복소제기의 금지는 출제가 되었으므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소금지는 '소취하의 효과'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서술한다면 훨씬 더 고득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채점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니, 채점은 채점위원에게 맡기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을 응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강생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춘환 드림.

□ 강의방향

1. 민사소송법이란?

“민사”“소송”“법”은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즉 민사사건) 당사자가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제도(민사소송)를 규정한 절차법을 말합니다.

2. 민소법 공부는 조문이 중심

민소법 교재는 교과서든 수험서든,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성문법전에 대한 해석론이 그 주를 이룹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이 민사소송절차의 순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전에는 항상 해당 진도에서 문제되는 조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법에 대한 수강생 Q & A

1. 공인노무사가 민사소송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법 제2조 참고)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제절차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위 절차 등에 대한 기본법은 민사소송법이므로, 이를 공부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하지만 어차피 선택과목이고, 선택과목은 점수득점 면에서 유리해야 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공인노무사 민소법은 이제 6회 시험을 지났을 뿐이므로,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이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해, 좋은 득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소“법”은 다른 “학”과는 달리 분명히 답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은 받을 수 있는 과목이므로, 결코 다른 과목보다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표준점수제가 도입되었으므로, 민소법을 응시한 사람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3. 그러면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민소법은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 그 흐름에서 문제되는 중요주제들을 위주로 이해, 숙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형식의 면에서 1회 시험에서는 (준)단문이 나왔지만, 현재 1문은 CASE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제 교재, 단문자료 등을 숙지하되, 간단한 사례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해나 수험준비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수업시간에는 간단한 사례를 풀어드립니다.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소법,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진도별 강의내용(공인노무사 시험 등 2차 시험 기출연도 표시 포함)

회수	중요테마	비고
제1회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법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 시 34, 50)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민사소송 절차 개요
제2회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法 15),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제3자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 10.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1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제3회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法 12)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辨 42) 20.소제기의 실제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제4회	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司 53) 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辨 44) 23.채무부존재확인인 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勞 2)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28.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 준비서면, 변론준비절차
제5회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法 13) 33.무변론판결(司 45)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 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 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勞 2), 현저한 사실 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3),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38.문서제출명령(司 47) 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1.자유심증주의(勞 1) 및 그 예외-증명방해(임증방해)의 문제 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 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명(辨 39)	* 추후보완제도, 송달(공시송달) * 증인에 대한 감치제 도의 신설
제6회	44.소송종료선언(司 43) 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司 53) 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3) 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 48.화해권고결정 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司 43, 49) 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	* 청구의 포기.인낙 * 재판의 의의 및 종류
제7회	52.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와 모순관계(司 52) 53.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 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 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司 40) 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제법상 구제책(司 40) 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 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司 53)
제8회	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중간확인인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불요한 경우(司 46)	

	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 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동.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勞 1, 司 38, 45, 47, 53) 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3) 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제9회	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75.선정당사자-선정후의 선정자의 지위 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 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 勞 2) 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司 48) * 공동소송참가(司 48)
제10회	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 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 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 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 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94.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司 44) 95.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司 39, 41, 43, 48) 96.상계의 항변의 소송법상 문제점(辨 45, 辨 46)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	* 소송법상 중요문제, 종합정리